

북한 중간계층의 결정요인과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정은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국문요약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북한의 중간계층을 결정하는 요인과 특성을 찾아내고, 중간계층의 생활양식에 나타나는 독특한 사회적 속성이 존재하는가를 밝혀보고자 한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계층 분화 및 사회 불평등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객관적 지표로서 측정된 계층과 주관적 귀속의식으로서 계층 간 불일치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불일치 현상은 중간계층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게다가 북한사회의 계층분화는 상층과 하층이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이다. 계층 위치를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서 직업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객관적 계층에서보다 주관적 계층에서 직업이 계층 간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줬다.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과 같은 직업은 북한에서는 중층이 아닌 상층에 속하는 현상이 특징적이다.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계층 분화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의식주 생활은 물론 소비생활과 정보 환경에 이르기까지 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객관적 계층 내에서 보다는 주관적 계층 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상층의 생활양식은 상당히 일관되고 동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간계층의 생활양식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양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사회에 경제적 지위로서 중간계층은 존재하지만 동질적인 구성 요소나 사회적 속성을 가진 중간계층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

주제어: 중간계층, 결정요인, 생활양식, 계층분화, 불평등, 북한이탈주민.

* 이 글은 2015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2015년 10월 13일)에서 발표된 논문 “북한 중간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생활양식”을 수정·보완한 것임.

I. 서론

최근 십수 년 동안 북한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수많은 미시적·거시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북한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방법과 접근의 다양성만큼이나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의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하는 연구 목적 역시 매우 다를 수 있다. 이 글은 “북한에 중간계층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며 그 답의 실마리를 실증적으로 찾아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그리고 질문은 다시 “왜” 중간계층에 주목하는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설명하는 다양한 연구들 중에서 중산층의 성장과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관점이 있다.¹⁾ 또한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예를 들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르과이 등—에서 민주주의국가나 관료적 권위주의국가의 수립과 붕괴는 모두 중간계급의 지지와 후원이 없이는 불가능하였다.²⁾ 달 존슨(Dale Johnson)에 의하면, 중간계급은 개혁과 혁명적인 세력의 정치적 전략에서나 반동적인 세력의 헤게모니 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위기의 순간에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³⁾ 사회주의 시민사회 연구에서도 중간계급의 역할은 중요하다. 로버트 밀러(Robert Miller)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시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거에 몰락했던 중산계층의 재건 또는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⁴⁾ 이런 맥락에서 북한사

1) 이러한 관점을 제시한 연구들로는 한상진, “한국중산층은 보수적인가?,” 『사상과 정책』 제3권 제3호(1986);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전환기의 한국사회: 국민의식조사자료집』(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등이 있다.

2) 유희정, “사회불평등구조에서 관한 중간계급의 의식 연구,” 『한국사회학』 제22호 여름호(1988), p.140.

3) Dale L. Johnson, *Middle Classes in Dependent Countries* (London: Sage, 1985).

회에서 중간계층의 형성 여부와 나아가 중간계층의 사회경제적 속성에 대한 분석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국내에 중국 또는 러시아의 중간계층에 대한 연구들이 이미 상당수 있는 반면에, 북한의 중간계층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실증적인 북한의 계층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소득이나 직업과 같이 계층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지표들이 포함된 데이터가 부재하는데 기인한다. 특히, 북한주민의 공식적인 소득과 관련된 통계 자료는 결코 영원히 접할 수 없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해 북한 정부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5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시장화, 정보화, 자유화’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146명이 응답한 북한에 거주할 당시 월평균 공식 소득은 90.4%가 5,000원 미만인 반면에, 월평균 비공식 소득은 77.5%가 10만 원 이상으로 두 소득간의 격차가 매우 컸다.⁵⁾ 이처럼 북한주민의 소득 중에서 비공식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은 북한 정부가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보유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 글은 북한의 중간계층을 결정하는데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또한 북한의 중간계층이 다른 계층과 구별되는 사회적 속성-예를 들어, 고유한 생활양식이나 소비 행태, 문화적 실천 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를 설명하려는 것이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이다.

⁴⁾ Robert F. Miller(ed.),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in Communist Systems* (North Sydney: Allen & Unwin, 1992), pp.143-144.

⁵⁾ 장용석·정은미·김병로·최규빈, “2015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변화: 시장화, 정보화, 자유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2015.8.26), p.13.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 자료

1. 중간계층의 개념과 사회적 맥락의 차이

한국사회에서는 중간계층보다는 중산층이라는 용어가 더 대중적으로 사용된다.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 중산층 용어가 195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⁶⁾ 이재열에 의하면, 중산층 개념은 비교역사적 접근을 했을 때 국가별 특성과 경로의존성이 존재하며, 국가마다 개념화되는 역사적 과정과 정책적 함의가 다르다. 서구의 경우 중간계급(middle class)은 본래 귀족과 농민으로부터 전문직과 상공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특히 미국에서는 주로 노동계급 중 화이트칼라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됐다. 일본에서는 중류(中流) 개념을 사용되었는데, 1980년대 고도성장의 후반기에 80%이상이 중류라고 자신의 지위를 규정하였다. 이 시기 중류는 엘리트에게 추종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간대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들은 주택과 승용차 보급률이 높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했다. 한국에서 중산층(中産層) 개념은 1960년대에 자영업주와 소상공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출발하여 1970년대 이후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한국의 1980년대 중산층과 일본의 1970년대 중류는 사회의 안정을 제공하는 중심축이자 미래 변화의 주역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1970년대, 일본의 1990년대, 한국의 2000년대 중산층 담론은 계층간 분절의 심화, 탈산업화, 몰락하는 중간계층 등의 위기감 속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⁷⁾

⁶⁾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p.5.

한국사회에서 중산층 용어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개념적으로 그 의미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왔는데, 첫째는 사회학계의 중간계급에 대한 논의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중간에 위치하는 층으로서의 관점, 둘째는 정부 및 정책연구기관에서 주로 다루는 중간소득계층으로서의 관점, 마지막으로 정치학계의 중간계층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집단 간 갈등을 완충하는 집단으로서의 관점이다.⁸⁾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중간계층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펴낸 『조선대백과사전』(2004년)에는 계층이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 사전에는 ‘계급’, ‘계급분화’, ‘계급사회’ 등의 용어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사회과학출판사가 펴낸 『경제사전』(1985년)과 『철학사전』(1985년)에도 계층이라는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계층’과 ‘중산계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문헌은 바로 『정치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3년)이다. 이것은 북한 당국이 계층 또는 중산계층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치사전』에서는 계층을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사회적 집단”이라고 정의하면서 이어 “계층은 독자적인 사회정치적 세력으로 될 수 없다. 계층 가운데는 인테리와 같이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으며 룬펜프롤레타리아와 같이 기생적 생활을 하는 계층도 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오직 노동자, 농민에게 복무하는 근로인테리만이 계층으로 남아있게 된다”⁹⁾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에 의하면, 사회주

7) 이재열, “한국의 사회통합과 중산층 육성의 과제,” 『중산층과 한국의 사회통합』, 한국사회학회 중산층포럼 제3차(2006.9.21), pp.156~157.

8) 조동기,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제29권 제3호(2006), pp.91~92.

의화된 북한사회에서 계층으로 남아있는 주요 사회구성원은 근로인테리 뿐이다.

나아가 『정치사전』은 중산계층을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개인 노동에 기초하여 생활하는 소상공생산자 및 그와 비슷한 경제적 처지에 있는 사회층”으로 정의하며, “중산계층에는 지난날의 중농, 도시소시민, 인테리 등이 속한다. 중농, 도시소시민 등은 비록 적으나마 생산수단이 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자산계급에 가깝고 자기의 노력으로 생활하는 측면에서는 근로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중농과 도시소자산 계급을 협동화를 통하여 사회주의근로자로 개조하였다. 또한 지난날의 인테리들을 포섭하고 교양개조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사회주의적근로인테리로 개조하였다”¹⁰⁾고 설명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공간(公刊) 문헌 어디에서도 중산계층을 포섭하거나 개조된 대상으로 설명할 뿐이지 중산계층이 소멸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명 논리를 뒤집어 보면, 과거에 개조되었거나 포섭되었던 중산계층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잠재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확산된 시장이 바로 중산계층의 ‘부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개인의 인식은 그의 객관적 계급위치(직업이나 생산관계의 위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측정할 때 하층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중간계층이라고 생각하여 중간계층의 여가생활이나 소비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 한 개인의 행동에는 그의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모두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요인 역시

9)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185.

10) 위의 책, p.1068.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미국사회의 경우 직업적 지위는 주관적 계층의 식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며, 교육, 숙련도, 소득, 작업 권한과 재량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¹¹⁾ 한국사회의 경우, 홍두승은 한국사회의 중산층을 판별하는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제시했는데, 객관적 기준은 다시 경제적 차원(생산 및 소유관계, 소비와 경제수준)과 사회문화적 차원(학업섭취와 문화)으로 나뉜다. 그리고 객관적 기준을 보여주는 주요 변수는 직업, 소득, 자산, 교육, ‘중산층문화’(생활양식이나 소비문화)이 포함되며, 주관적 판별 기준으로 는 중 또는 중하의 귀속의식이 해당된다.¹²⁾

또 중간계층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객관적 지표로 분류된 계층의 위치와 주관적 귀속의식으로서 계층의 위치가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동기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대 중반에 객관적인 기준으로 측정된 중산층의 규모는 약 66.8%이나, 주관적 귀속의식을 조사했을 때 중산층은 약 20%로 나타나 객관적 중산층 비율과 주관적 중산층 비율 간의 괴리를 보였다. 그리고 중산층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택 소유 변수가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개혁개방 이후 사회 계층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객관적 지표로 측정된 계층의 비중과 주관적 귀속의식으로서 계층의 비중은 불일치 경향이 뚜렷했으며, 내부적으로도 직업위치와 소득위치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했다.¹⁴⁾

11) Mary R. Jackman and Robert W. Jackman, *Class Awareness in the United Stat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p.40.

12)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 p.97.

13) 조동기,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pp.106~107.

14) 중국의 중간계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중희, “중국 중간계층의 특성 및 상태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2006)을 참조할 것.

2. 분석자료

이 글에서 주요 분석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매년마다 북한이탈주민들(탈북 후 남한 입국까지 경과시간이 1년 미만인 대상으로 제한됨)을 면대면 방식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공식명칭 ‘북한사회변동조사’) 결과의 일부분이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는 총 660명이며,¹⁵⁾ 조사 결과에는 <표 1>에서 보이듯 성별과 연령은 물론 재북 시 거주지역, 교육수준, 당원여부, 공식 및 비공식 소득, 장사 경험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정보와 생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성별의 경우 남성 39.1%, 여성 60.9%로 여성의 비중이 더 크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통계(2015년 10월말 기준)에서 남한에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중이 70%인 것과 비교했을 때 분석 자료에 사용된 데이터에서 여성의 비중은 다소 감소했다. 연령대 분포의 경우 통일부의 통계와 비교했을 때 3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의 비중이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 비중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⁶⁾ 거주지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함경북도 43.7%, 양강도 40.8%로 두 지역을 합

¹⁵⁾ 조사 연도별 표본 수는 2011년 105명, 2012년 127명, 2013년 133명, 2014년 149명, 2015년 146명이다. 각 해당연도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조사 직전 연도에 북한을 탈출하였다. 해마다 통일부가 발표하고 있는 연도별 입국 북한이탈주민들과 관련된 통계에서 탈북연도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조사에 참여한 동일연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모집단에서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유관 정부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각 조사의 표본수는 해당 모집단에서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

¹⁶⁾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통계(2015년 6월말 기준)에 의하면 전체 북한이탈주민들의 연령대는 20대 28.2%, 30대 29.5%, 40대 16.5%, 50대 5.3%, 60대 이상 4.3%로 구성되어 있다.

한 비중이 전체 비중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적 편중 현상이 매우 심하다.¹⁷⁾ 이 지역적 편중 현상은 대체로 탈북자들이 중국과 국경이 접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인한다. 데이터의 지역 편중 문제는 분석 결과를 북한사회의 변화나 실태로 일반화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내포한다.

재북 시 학력수준의 경우 전문대와 대학교의 비중은 각각 17.7%, 14.6%로 통일부의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통계(2015년 6월말 기준)에서 전문대 9.4%, 대학교 6.9%의 비중과 비교했을 때 고학력 표본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직업 분포의 경우 노동자가 31.1%로 가장 많고, 화이트칼라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원과 전문직을 합한 비중이 16%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¹⁸⁾

비록 이 연구에 분석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된 것일지라도 그들이 북한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의 정보들이기 때문에 북한사회의 중간계층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해내지 못할지라도 중간계층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하지만 과소 사례이자 특수 사례인 북한이탈주민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쉽게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17)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통계(2015년 6월말 기준)에 의하면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함경북도의 비중은 63.2%, 양강도의 비중은 12.8%로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의 지역 분포와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분석자료에서 양강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양강도 출신 탈북자의 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다.

18) 통일부의 직업 분류 체계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조사 데이터의 직업 분류 체계와 상이한 관계로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표 1〉 분석 자료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분포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258	39.1
	여성	402	60.9
연령대	20대	206	31.5
	30대	155	23.7
	40대	161	24.7
	50대	83	12.7
	60대 이상	48	7.4
재북 거주지	평양	7	1.1
	남포	4	0.6
	평안남도	14	2.1
	평안북도	10	1.5
	함경남도	43	6.5
	함경북도	288	43.7
	자강도	1	0.2
	양강도	269	40.8
	황해남도	5	0.8
	황해북도	11	1.7
	강원도	7	1.1
재북 교육수준	대학교	96	14.6
	전문학교	116	17.7
	고등중학교	429	65.4
	인민학교	11	1.7
	무학	4	0.6
재북 직업	노동자	202	31.1
	농민	43	6.6
	사무원	63	9.7
	전문가	41	6.3
	학생	41	6.3
	군인	31	4.8
	외화벌이일군	13	2.0
	장사	80	12.3
	가정부인	92	14.2
	무직 및 기타	44	6.8
재북 당원 여부	당원	93	14.3
	후보당원	3	0.5

	비당원	556	85.3
재복 장사 경험	있음	475	72.5
	없음	180	27.5

주: 위의 표에 기재된 빈도는 결측값 처리된 것으로 항목별 합계가 다를 수 있음

Ⅲ. 북한 중간계층의 결정요인 분석

1. 중간계층의 측정과 분포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객관적 지표로 측정된 중간계층과 주관적 귀속 의식으로서 중간계층은 일치하지 않는다. 사회계층을 구분하는데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것들로써는 직업, 교육수준, 소득, 자산 등이 있다. 이 글에서 활용하고 있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 자료에는 직업, 교육수준, 소득 등의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교육수준은 북한사회에서 객관적·주관적 계층을 결정하는데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북한에서 교육수준은 소득 형성 및 생활수준을 결정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개인의 교육수준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 사회에서 교육수준은 계층 이동의 주요 변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신 북한사회에서는 어떠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사회계층을 결정하는데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점이 될 것이다.

우선, 북한사회의 객관적 지표로서 월평균 비공식 소득을 기준으로 계층 구분을 하였다.¹⁹⁾ 물론 이 소득 자료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 주민 660명이 북한에 거주했을 때의 소득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전체

의 실제 소득 자료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소득 통계자료를 획득할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북한주민의 소득 수준을 추정해보고, 그 소득 자료를 통해 북한의 계층분화 및 사회 불평등을 분석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체 표본 660명의 소득에서 중위소득 값은 150,000만원으로 측정되었다. OECD의 기준에 따라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150%로 설정했을 때, 하층은 월평균 소득 75,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중층은 월평균 소득 75,000원~225,000원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상층은 월평균 소득 225,000원 초과일 경우에 해당된다. 그 결과, 상층은 37.1%, 중층은 20.2%, 하층은 32.3%로 나타났다.²⁰⁾ 일반적으로 사회계층의 구조가 다이아몬드 형태(선진국형) 또는 피라미드 형태(후진국형)로 나타나는 반면에, 활용한 조사 자료의 소득 분포의 특성으로 인해 흥미롭게도 절구형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시사한다. 첫 번째 의미는 탈북 시도가 북한사회에서 상층과 하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층보다는 상층과 하층의 소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상층과 하층의 탈북의

19) 월평균 공식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중위소득이 110원으로 명목소득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여 이 글에서는 비공식 소득을 계층 구분의 자료로 사용했다.

20) 중국사회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나타난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중간계층의 성장인데, 중국 사회과학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간계층은 1978년 4.8%에서 2001년 18.9%로 증가했다. 이중희, “중국 중간계층의 특성 및 상태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2006), p.256. 북한에서 시장화의 진행이 20년 정도 경과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시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추정 분류한 중간계층의 규모가 중국사회가 개혁개방 후 20년 정도 경과 후에 측정된 중간계층의 규모와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동기와 목적은 각각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하층의 경우 생계형 탈출이라는 성격이 강한데 반해, 상층의 경우 다원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자유화나 더 나은 삶의 추구 등과 같이 복합성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의미는 북한사회가 남한사회와 같이 빠르게 양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나 소련의 사례 등을 볼 때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할 경우 일정 시기 시장을 통해 새롭게 부(富)를 획득하고 축적한 신중산층이 빠르게 증가한다. 북한사회 역시 시장화가 1995년 이후부터 20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부유층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들의 경제이윤의 창출은 심각한 부패 및 정경유착의 구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²¹⁾ 이러한 북한의 경제 구조로 인해 중산층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증가보다는 상층과 하층이 동시에 증가하는 이례적인 계층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객관적 지표로서 측정된 계층 구조와 주관적 귀속 의식으로서 측정된 계층의 구조는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에게 탈북 직전에 북한에서 자신이 속했던 계층을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660명 가운데 상층 5%, 중층 53.6%, 하층 24.7%로 나타나 다이아몬드 형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경우는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된 중산층의 규모가 주관적 귀속의식으로서 중산층의 규모보다 훨씬 더 컸던 것과 달리, 북한사회는 정반대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흥미롭게도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중간계층이 크게 성장했는데 주관적 귀속의식으로서 중간계층이 실제 객관적 지표로 측정된 중간계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²²⁾

²¹⁾ 자세한 내용은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를 참조할 것.

²²⁾ 이중희, “중국 중간계층의 특성 및 상태의 변화,” p.273.

다음으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귀속의식으로서 계층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비교해 보았다. <표 2>에서 보이듯, 주관적 계층의식에서 상층이라고 응답한 자들 가운데 객관적 계층으로서 상층에 속하는 비율은 7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상층이라고 응답한 23.3%는 하층의 소득집단에 속했다. 반면, 주관적으로 중층이라고 응답한 자들 가운데 객관적 중층에 속하는 비율은 23.5%에 불과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신에 주관적으로 중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절반 이상(52.4%)이 상층의 소득집단에 속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으로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객관적 기준으로 하층에 속하는 경우는 51%로 나타났고, 나머지 22.4%와 26.5%는 각각 상층의 소득집단과 중층의 소득 집단에 속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사회에서는 소득이 주관적 계층을 결정하는데 주요 요인이 아님을 보여준다. 나아가 객관적 지표로 측정된 계층과 주관적 귀속으로 나타난 계층 간의 격차가 가장 큰 것은 중층임을 알 수 있다.

<표 2> 북한사회의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 교차

단위: 명(%)

		주관적 계층			합계
		상층	중층	하층	
객관적 계층	상층 (월소득 225,000원 초과)	21(70)	172(52.4)	33(22.4)	225 (44.8)
	중층 (월소득 75,000원~225,000원)	2(6.7)	77(23.5)	39(26.5)	118 (23.4)
	하층 (월소득 75,000원 미만)	7(23.3)	79(24.1)	75(51)	161 (31.9)
합계		30(100)	328(100)	147(100)	505(100)

$\chi^2=52.986, p=0.000$

2. 중간계층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구성적 특성

앞서 서론에서 한국사회의 경우 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중산층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택 소유 변수가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북한사회에서 주관적 계층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가운데 소득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북한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수준, 직업, 당원 여부, 장사 경험 등이 북한주민의 계층 위치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표 3>에 보이듯, 교육수준과 당원 여부 변수는 공통적으로 객관적·주관적 계층을 결정하는데 통계적으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객관적 계층을 결정하는데 직업과 장사 경험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에, 주관적 계층을 결정하는 데는 직업 변수가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든스는 사회과학자들이 직업을 사회계급의 지표로 즐겨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수준의 사회적 이익이나 손실을 경험하고, 공통적인 생활양식을 보이며, 유사한 생애기회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²³⁾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사 자료에서도 북한주민의 계층을 설명하는데 직업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화’를 매개로 나타나는 사회 변화의 성격이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3) 앤서니 기든스, 김미숙 외 옮김, 『현대사회학』(서울: 을유문화사, 2001), p.259.

〈표 3〉 객관적·주관적 계층과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통계적 상관성

	교육수준a)	직업b)	당원 여부c)	장사 경험d)
객관적 계층	$\chi^2=12,803$ $p=0,119$	$\chi^2=39,611$ $p=0,000$	$\chi^2=4,984$ $p=0,289$	$\chi^2=98,622$ $p=0,000$
주관적 계층	$\chi^2=11,753$ $p=0,163$	$\chi^2=52,533$ $p=0,000$	$\chi^2=0,696$ $p=0,952$	$\chi^2=4,394$ $p=0,111$

- a) 척도: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인민학교, 무학
- b) 척도: 노동자, 농민, 사무원, 피부양자, 학생, 군인, 가정부인, 무직
- c) 척도: 당원, 후보당원, 비당원
- d) 척도: 유, 무

구체적으로, 직업별 계층 분포를 살펴보면 〈표4〉에서 보이듯, 노동자의 경우 객관적 계층에서는 상층에 속하는 비율이 58.9%인데 반해 주관적 계층에서는 2.1%에 불과할 정도로 그 격차가 매우 크다. 농민의 경우는 객관적 계층에서는 14.3%가 상층에 속하지만 주관적 계층에서는 0%이다. 이 결과는 북한사회에서 일부 노동자와 농민의 경우가 비록 상층의 소득집단에 속할 수 있다하더라도 주관적 귀속의식 차원에서 그들이 상층이라고 느끼는 가능성은 거의 없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사무원의 경우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무원은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을 모두 포함한 매우 포괄적인 직업군이다.²⁴⁾ 재북 시 직업이 사무원이었던 응답자들 가운데 57.5%가 객관적 계층에서 상층에 속했고, 17.8%가 주관적 계층에서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했다. 직업들 중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으로서 상층에 속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직업은 사무원이다. 8개의 직업들 중에서 농민과 군인만을 제외하고

²⁴⁾ 북한의 2008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경제활동참여자의 직업 구성에서 고급관리직 남 2.5%, 여 0.5%, 전문직 남 12.9%, 여 10.8%, 사무직 남 0.3%, 여 1.4%이다. 김두섭 외,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대전: 통계청, 2011), p.110.

6개 직업들에서는 객관적 계층에서 상층에 속하는 비율이 공통적으로 50% 이상이다. 반면에, 사무원을 제외한 7개 직업들에서 주관적 계층에서 상층에 속하는 비율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흥미로운 것은 가정부인의 경우 객관적 계층에서 60%가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주관적 계층에서 가정부인의 경우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로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북한사회에서 가정부인이 시장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정부인 중 고소득자들이 많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에 주관적 계층에서는 중층에 속한다는 응답률이 66.7%로 가정주부의 경우 역시 소득과 직업 간의 지위 불일치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

〈표 4〉 직업별 객관적·주관적 계층 분포

(단위: %)

		노동자	농민	사무원	피부양자	학생	군인	가정부인	무직/기타
(A) 객관적 계층	상층	58.9	14.3	57.5	66.7	50.0	30.8	60.0	75.8
	중층	16.7	42.9	15.0	0.0	10.0	0.0	21.8	9.1
	하층	24.4	42.9	27.5	33.3	40.0	69.2	18.2	15.2
	소계 (N)	90	21	40	3	20	13	55	33
(B) 주관적 계층	상층	2.1	0.0	17.8	0.0	0.0	7.7	5.0	9.1
	중층	69.1	20.0	68.9	66.7	85.0	61.5	66.7	78.8
	하층	28.7	80.0	13.3	33.3	15.0	30.8	28.3	12.1
	소계 (N)	94	20	45	3	20	13	60	33

(A) $\chi^2=39.611$, $p=0.000$, (B) $\chi^2=52.533$, $p=0.000$

반대로 계층 내 직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북한사회에서 직업과 계층 간의 상관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5>에서 보이듯, 객관적 계층의 상층, 중층, 하층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은 공통적으로 노동자이다. 하지만 주관적 계층의 상층, 중층, 하층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은 일치하지 않는다. 상층의 경우는 사무원이고, 중층과 하층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노동자이다. 게다가 중층과 하층 내에는 직업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상층의 경우에는 사무원이 47.1%를 차지해 편중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계층 내 직업 분포

(단위: %)

	객관적 계층*			주관적 계층**		
	상층	중층	하층	상층	중층	하층
노동자	34.6	31.9	29.3	11.8	33.7	34.6
농민	2.0	19.1	12.0	0.0	2.1	20.5
사무원	15.0	12.8	14.7	47.1	16.1	7.7
피부양자	1.3	0.0	1.3	0.0	1.0	1.3
학생	6.5	4.3	10.7	0.0	8.8	3.8
군인	2.6	0.0	12.0	5.9	4.1	5.1
가정부인	21.6	25.5	13.3	17.6	20.7	21.8
무직 및 기타	16.3	6.4	6.7	17.6	13.5	5.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chi^2=59.284$, $p=0.000$, ** $\chi^2=52.533$, $p=0.000$

따라서 <표 4>와 <표 5>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사회에서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간의 불일치가 매우 크다. 특히, 직업별 위치와 소득 위치간의 불일치가 뚜렷하다. 둘째, 북한사회에서 직업의 차이는 객관적 계층을 형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주관적 계층에서는 직업의 차이가 계층을 결정하는 데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북한사회에서 객관적 계층 내 이동의 장벽은 낮으나, 주관적 계층 내 이동의 장벽은 높을 수 있다. 북한사회에서 객관적 계층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직업 외에 장사경험 유무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따라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보다는 장사를 통해 얼마나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객관적 계층 위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주관적 계층에서 상층의 경우는 “특정 직업”(사무원)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북한사회가 객관적 계층 차원에서는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주관적 계층 차원에서 계층 이동의 장벽이 높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넷째,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관리직, 전문직, 서비스직 등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중간계층을 구성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인 반면에 북한에서는 사무원이 중간계층보다는 상층계층에 더 가깝다. 객관적 계층 내에서 사무원이 상층을 차지하는 비중보다 주관적 계층 내에서 사무원이 상층을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며, 특히, 사무원 중에서 객관적 계층에서 상층을 차지하면서 동시에 주관적 계층에서도 상층을 차지하는 경우가 북한사회에서는 최상위 계층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필자가 통계 처리를 해본 결과, 사무원이면서 객관적·주관적 계층 모두에서 상층을 차지하는 비율은 87.5%($\chi^2=18.034$, $p=0.001$)로 나타나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대로 노동자이면서 객관적·주관적 계층 모두에서 상층을 차지하는 비율은 0%($\chi^2=14.306$, $p=0.00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사회에서 중간계층을 형성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 가운데 동질적 특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분석자료의 결과에 의하면, 북한사회에서 객관적 지표로 측정된 중간계층은 경제적 지위(특히, 소득)에서 중간에 위치한다는 동질성을 갖고 있지만 다양한 직업집단으로 구성

되어 있고 다른 계층에 비해 내부적으로도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⁵⁾

IV. 북한 중간계층의 사회문화적 특성

1. 계층과 문화적 요인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자들은 시장 위치, 생산수단에 대한 관계, 직업 등을 계급 위치의 주요 지표로 사용했다. 하지만 일부 사회과학자들은 한 사람의 계급 위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이나 고용 측면뿐 아니라 생활양식, 소비패턴과 같은 문화적 요인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⁶⁾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사회학자로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를 들 수 있다. 그는 모든 문화적 실천과 선호도는 교육수준과 이차적으로는 출신계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취향은 '계급'의 지표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²⁷⁾

²⁵⁾ 흥미롭게도 북한사회에서 발견되는 중간계층의 특성은 중국사회와도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중희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중간계층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은 비교적 동질적인 반면에, 중간계층은 내부적으로 매우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국의 중간계층의 직업과 소득이 일치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은 2000년 이후이다. 개혁개방 전에는 전문기술자, 사무원, 개체공상호의 소득이 중간적 위치에 있지 못했지만, 개혁개방 이후 소득이 꾸준히 상승하여 직업별 위치와 소득 위치가 일치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일치화 추세는 다른 계층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다. 이중희, “중국 중간계층의 특성 및 상태의 변화,” pp.262~263.

²⁶⁾ 기든스, 『현대사회학』, p.267.

²⁷⁾ 피에르 부르디외, 최중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서울: 새물결, 2006), pp.21~22.

북한사회에서 유일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정신적, 의식적 차원뿐만 아니라 일상의 물질적 차원까지 전체주의적 성격을 띤다. 모든 북한 인민들은 연령, 직종 및 직무, 노동 강도 등 여러 기준들에 의해 정해진 배급제를 통해 획일적인 의식주 생활을 누려왔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급진적인 시장화는 북한주민의 전체주의적 생활양식에 균열을 발생시켰으며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가속화되면서 생활양식이나 소비행태와 같은 문화적 요인은 계급 또는 계층의 위치를 구분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우 사회계층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한데 그 중에서도 중산층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중산층은 체제 비판적 성향보다는 계급 간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또한 소비문화를 주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중산층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중산층은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자가 주택과 승용차를 구입할 능력을 갖고, 고급 내구소비재와 레저, 관광, 외식, 교육 등에 일정한 소비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며, “소비 증대와 더불어 새로운 소비 모델의 추구하고 소비구조의 고급화를 주도하는 주체”이다.²⁸⁾

그렇다면 중국과 유사한 사회체계-일당지배와 시장경제의 사회주의를 가진 북한에서 사회변화와 함께 중간계층의 생활양식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다른 계층과 식별되는 사회적 속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자. 여기서 사회적 속성이라 함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계층에 걸맞은 생활을 하려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28) 서석홍, “중국 도시지역 중산층의 성장과 소비구조의 전환,” 『현대중국연구』 7권 2호(2006), pp.6-18.

2. 불평등과 중간층의 사회적 속성

1) 의식주 생활

2010년 이후 북한주민의 식생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양적인 차원보다는 질적인 차원에서 계층 간 불평등이 훨씬 뚜렷하다는 점이다. 응답자 506명 가운데 하루 세끼의 식사를 했다는 응답률은 79.8%, 하루 두끼의 식사를 했다는 응답률은 11.7%, 하루 한끼의 식사를 했다는 응답률은 7.3%로 나타나 대체로 10명 중 8명은 하루 세끼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간 격차도 크지 않았다. 소득 상층(월평균 225,000만원 초과)에서 하루 세끼 식사의 응답률은 86.2%, 소득 중층(월평균 75,000원~225,000원)에서 하루 세끼 식사의 응답률은 76.5%, 소득 하층(월평균 75,000원 미만)에서 하루 세끼 식사의 응답률은 73.5%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관적 계층에 따른 하루 식사의 횟수 응답률은 소득별 계층에 따른 응답률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계층에서 하루 세끼의 식사를 했다는 응답률은 상층 90.3%, 중층 86.7%, 하층 62.5%로 나타나, 상층과 중층은 소득별 계층에 따른 응답률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에 하층은 오히려 더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주식의 구성과 고기섭취 횟수와 같이 식생활의 질적인 측면은 계층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소득별 계층에서 주식을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는 응답률은 상층 60.5%, 중층 32.4%, 하층 23.9%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계층에서는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는 응답률이 상층 84.2%, 중층 47.4%, 하층 14%로 나타나 객관적 지표로 분류한 계층보다 오히려 주관적 귀속의식으로서 계층에서 식생활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기의 섭취 횟수에서도 계층간 격차가 뚜렷이 발견된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의 고기를 섭취했다는 응답률은 소득별 계층에서 상층 51.3%, 중층 24.2%, 하층 20.9%로 나타난 반면에 주관적 계층

에서 상층 84.8%, 중층 42.2%, 하층 6.8%로 나타나 주관적 계층 간 격차가 더 뚜렷하게 나타남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식생활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 불평등은 객관적 지표로 측정된 계층에서보다 주관적 귀속의식으로 분류된 계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6〉 계층별 고기섭취 횟수

단위: 명(%)

	객관적 계층*			주관적 계층**		
	상층	중층	하층	상층	중층	하층
거의 매일 섭취	38(16.8)	2(1.7)	8(4.9)	11(33.3)	36(10.2)	1(0.6)
일주일에 한두번 섭취	78(34.5)	27(22.5)	26(16.0)	17(51.5)	113(32.0)	1(6.2)
한달에 한두번 섭취	86(38.1)	57(47.5)	69(42.3)	4(12.1)	166(47)	60(37)
일년에 한두번 섭취	24(10.6)	32(26.7)	48(35.6)	1(3.0)	38(10.8)	86(53.1)
먹어본 적 없음	0(0.0)	2(1.7)	3(1.2)	0(0.0)	0(0.0)	5(3.1)
합계	225(100)	120(100)	162(100)	33(100)	353(100)	162(100)

* $\chi^2=70.286$, $p=0.000$, ** $\chi^2=189.356$, $p=0.000$

다음으로 의생활을 살펴보면, 계절마다 한두 벌의 옷을 구입해 입었다는 응답의 경우 소득 상층 52.9%, 소득 중층 28.3%, 소득 하층 30.9%로 오히려 중층보다 하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주관적 계층의식에서는 상층 81.8% 중층 47.7%, 하층 11.2%로 나타나 소득별 계층보다 계층 간 격차가 훨씬 크게 나타났으며, 소득계층에서와 달리 중층이 하층보다 더 나은 의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옷의 원산지과 구입처의 경우 소득계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관적 계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옷의 원산지 경우 중국산이 86.2%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상층은 남한산과 일본산, 중층은 중국산, 하층은 북한산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옷의 구입처 역시 시장이 92.8%를 차지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백화점이나 해외에서 직접 구입했다는 응답의 경우는 상층에서만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7〉 계층별 옷 구입 횟수

단위: 명(%)

	객관적 계층*			주관적 계층**		
	상층	중층	하층	상층	중층	하층
계절마다 한두 벌 구입	119(52.9)	34(28.3)	50(30.9)	27(81.8)	169(47.7)	18(11.2)
일 년에 한두 벌 구입	85(37.8)	52(43.3)	51(31.5)	4(12.1)	138(39)	61(37.9)
몇 년에 한두 벌 구입	16(7.1)	30(25.0)	40(24.7)	1(3.0)	39(11)	53(32.9)
남한테 얻어 입음	3(1.3)	3(2.5)	18(11.1)	0(0.0)	4(1.1)	26(16.1)
기타	2(0.9)	1(0.8)	3(1.9)	1(3.0)	4(1.1)	3(1.9)
합계	225(100)	120(100)	162(100)	33(100)	354(100)	161(100)

* $\chi^2=64.184$, $p=0.000$, ** $\chi^2=144.077$, $p=0.000$

마지막으로, 계층별 살림집 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 경우 소득 상층 26.5%, 소득 중층 15%, 소득 하층 17.8%로 나타난 반면에, 주관적 계층에서 상층은 45.5%, 중층 25.4%, 하층 16.6%로 나타나 결과의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소득계층보다는 주관적 계층의식에서 아파트의 거주비율이 더 뚜렷하게 계층 간 차이를 보였다. 연립주택의 경우 소득 상층 42.4%, 소득 중층 53.4%, 소득 하층 39%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계층에서는 상층 9.1%, 중층 48.6%, 하층 63.8%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귀속의식으로서 상층에서 연립주택의 주거율이 현격히 낮아짐을 발견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소득 상층 19.2%, 소득 중층 19.5%, 소득 하층 16%인 반면에, 주관적 계층에서는 상층 39.4% 중층 21.2%, 하층 16%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객관적·주관적 계층 간 응답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상층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거주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중층과 하층은 연립주택의 주거율이 높다.

이밖에도 살림집의 개조 희망사항에 대한 응답분포에서 계층 간의 차이가 드러났다. 먼저 상층의 경우 살림집의 크기나 방의 수를 늘리고 싶다는 응답률이 타 계층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반면에, 중층과 하층은 집안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상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밖의 인프라 시설(난방, 취사, 화장실 등)의 개조 희망에 대한 응답률은 계층간 큰 격차가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소득이 높은 상층의 경우 살림집의 하드웨어적 측면을 중시하는 반면에, 중층과 하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집안을 장식하는 데 더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8〉 계층별 살림집의 유형

단위: 명(%)

	객관적 계층*			주관적 계층**		
	상층	중층	하층	상층	중층	하층
아파트	65(26.5)	20(15.0)	38(17.8)	15(45.5)	90(25.4)	27(16.6)
연립주택	104(42.4)	71(53.4)	83(39.0)	3(9.1)	172(48.6)	104(63.8)
단독주택	47(19.2)	26(19.5)	34(16.0)	13(39.4)	75(21.2)	26(16.0)
기타	10(4.1)	3(2.3)	8(3.8)	2(6.1)	17(4.8)	6(3.7)
합계	245(100)	133(100)	213(100)	33(100)	354(100)	163(100)

* $\chi^2=34.990$, $p=0.000$, ** $\chi^2=35.338$, $p=0.000$

2) 소비생활

북한주민의 월소득 중 지출내역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을 파악할 수 있다. 〈표 8〉에서 나타나듯이 월 지출내역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의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층간 비중의 차이가 나타난다. 식의주 문제 해결에 응답한 비율은 소득별 계층분류에서 소득 상층 69.6%, 소득 중층 77.7%, 소득 하층 76.3%로 나타나 계층 간 큰 차이는 없지만 상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중층과

하층의 비중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주관적 귀속의식으로서 계층간 격차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식의주 문제 해결에 대한 응답률이 주관적 계층에서는 상층 42.1%, 중층 70.8%, 하층 84.8%로 나타나 소득 계층과 비교하여 상층과 중층의 경우는 모두 비중이 감소한 반면에, 하층의 경우는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 특히, 상층의 감소폭이 매우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월 지출 내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사 또는 사업 밀천이다. 이 항목에서도 소득 계층과 주관적 계층 간의 불일치가 크다. 소득 상층 17.6%, 소득 중층 10.7%, 소득 하층 8.9%으로 계층 간 격차가 크지 않는 반면에, 주관적 귀속의식으로서 상층 42.1%, 중층 13.8%, 하층 4.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계층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특히 상층의 경우는 타 계층과 달리 식의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출과 같은 비중으로 장사 및 사업 밀천을 위해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본재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음을 보여준다.

한편, 자녀교육으로 지출하는 비중은 중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특히, 소득 계층에서 계층별 자녀교육의 비율보다 주관적 계층에서의 비율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층 0%, 중층 3.6%, 하층 0.8%로 나타나 중층이 자녀교육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위에서 교육수준이 객관적·주관적 계층을 결정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지만,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에게 교육은 중요한 '계층상승의 사다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층이 타 계층과 구별되는 소비영역은 사치품 소비이다. 위에서 중국사회의 중간계층이 고급 내구소비재의 구입 성향이 뚜렷하고 소비의 고급화를 주도하는 집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북한사회의 중간계층에서도 그러한 성향이 희미하게나마 관찰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소득계층에서 중층의 사치품 소비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여 크게 주목되지

않지만, 주관적 계층에서 중층이 사치품 소비의 비중은 타 계층과 단연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상층 0%, 중층 3.2%, 하층 0%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계층 위치와 상관없이 북한주민 대부분은 문화생활(유희장 이용, 극장관람 등)에 대한 지출이 거의 미미하다. 이것은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문화생활에 대한 수요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의 제약성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서, 장기적 경제침체로 인해 북한 당국이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가 감소했으며, 최근 김정은 정권이 '위민사업'의 차적으로 선전하는 평양 문수물놀이장이나 마식령 스키장과 같은 선진적인 문화 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표 9〉 계층별 소비영역의 비중

단위: 명(%)

	객관적 계층*			주관적 계층**		
	상층	중층	하층	상층	중층	하층
식민주 문제 해결	87(69.6)	80(77.7)	103(76.3)	8(42.1)	179(70.8)	112(84.8)
자녀 교육	3(2.4)	3(2.9)	3(2.2)	0(0.0)	9(3.6)	1(0.8)
장사/사업 밀천	22(17.6)	11(10.7)	12(8.9)	8(42.1)	35(13.8)	6(4.5)
뇌물	10(8.0)	2(1.9)	2(1.5)	2(10.5)	11(4.3)	3(2.3)
사치품 소비	1(0.8)	1(1.0)	5(3.7)	0(0.0)	8(3.2)	0(0.0)
문화생활	1(0.8)	0(0.0)	2(1.5)	0(0.0)	2(0.8)	1(0.8)
저축	0(0.0)	2(1.9)	5(3.7)	0(0.0)	6(2.4)	3(2.3)
기타	0(0.0)	2(1.9)	1(0.7)	0(0.0)	0(0.0)	3(2.3)
합계	125(100)	103(100)	135(100)	19(100)	253(100)	132(100)

* $\chi^2=32.026$, $p=0.043$, ** $\chi^2=68.663$, $p=0.000$

3) 정보화

사회변화의 속도만큼이나 북한주민의 생활양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류 문명발전에서 '제3의 물결'이라고 불리는 정보화가 북한사

회에서도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4년에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와 미국의 소리가 공동으로 조사 연구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Orascom)과 북한 체신성 산하 조선체신회사의 합작회사인 고려링크의 가입자 수는 2008년에 1,694명에서 2013년 5월 현재 2백만 명으로 급증했다.²⁹⁾ 동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휴대전화를 통해 단순 문자서비스(SMS)는 물론 영상통화까지 가능하다. 심지어 휴대폰의 문자서비스는 정부와 당의 체제 선전과 뉴스 전달에 활용되고 있다. 동 보고서는 한 탈북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북한에서 휴대전화의 소유여부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전한다.³⁰⁾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정보통신기기의 소유 여부가 새로운 사회계층의 지표로 기능하고 있음을 말해주며, 향후 정치경제적 지위에 따라 정보 불평등 현상이 북한사회에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올해 조사한 북한주민의 정보통신기기의 이용 실태를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들이 발견된다. 우선, 정보통신기기 보유 여부에 대한 전체 응답분포를 보면, 손전화(휴대전화) 55.5%, 컴퓨터 27.4%, 노트북 41.8%, 녹화기 66.4%, DVD 플레이어 45.2%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했던 고려링크의 가입자 수와 비교했을 때 이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휴대전화 보유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표본에서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비공식 휴대전화 사용자가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많은 연구 참여자들(북한 이탈주민)이 공식 등록된 휴대전화가 아닌 경우도 해당되는가를 조사원

29)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북한의 통신혁명은 시작됐는가?,”

US-Korea Institute at SAIS and Voice of America (2014), p.11.

30) 위의 글, p.23.

에게 질문하였다.

전반적으로 영상기기 보급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처럼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남한 영화나 드라마의 시청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태와 밀접히 관련 있다. 반면에 컴퓨터의 보급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의 북한 반입은 국제사회의 제재 품목으로서 다른 정보통신기기에 비해 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도 컴퓨터의 보급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컴퓨터의 보급이 낮기 때문에 사이버 의사소통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계층 간 정보화의 격차는 없는지 살펴보자. 정보통신기기의 보유에서도 마찬가지로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간의 보유율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객관적 계층 내에서의 보유율 격차보다 주관적 계층 내에서의 보유율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먼저,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계층 간 격차가 크게 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노트북이나 녹화기와 같이 영상기기의 경우에는 계층 간 격차가 덜 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녹화기의 경우에 상층과 중층의 보유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주관적 계층에서 상층의 경우 휴대전화의 보유율이 85.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보유율을 보였다. 또한 객관적 계층 내에서 일부 정보통신기기(컴퓨터, 노트북)는 중층보다 하층에서의 보유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으나, 주관적 계층 내에서는 일관되게 모든 정보통신기기를 중층이 하층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10〉 계층별 정보통신기기의 보유율

단위: 명(%)

	객관적 계층			주관적 계층		
	상층	중층	하층	상층	중층	하층
집전화	55(54.5)	3(17.6)	11(39.3)	13(92.9)	50(49.5)	5(19.4)
휴대전화	64(63.4)	8(47.1)	9(32.1)	12(85.7)	63(62.4)	6(19.4)
컴퓨터	33(32.7)	1(5.9)	6(21.4)	8(57.1)	31(30.7)	1(3.2)
노트텔	50(49.5)	2(11.8)	9(32.1)	8(57.1)	48(47.5)	5(16.1)
녹화기	75(43.3)	8(47.1)	14(50.0)	10(71.4)	72(71.3)	14(48.4)

주: DVD플레이어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표에는 포함하지 않음.

V. 결론

이 글은 북한의 중간계층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찾아내고, 계층의 구성적 특성을 설명하며, 중간계층의 생활양식에 나타나는 독특한 사회적 속성이 존재하는가를 밝혀보고자 한 것이다. 분석 자료로 활용된 조사데이터에는 66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2010년~2014년 시기에 북한에 거주할 당시 그들의 소득(공식, 비공식), 직업, 교육수준, 의식주 및 소비 지출,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등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사 데이터의 존재는 최근 몇 년 간 나타난 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계층 분화, 빈부격차, 소비행위의 변화 등)를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분석 결과, 북한사회에서 계층 분화 및 사회 불평등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객관적 지표로서 측정된 계층과 주관적 귀속의식으로서 계층 간의 불일치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객관적·주관적 계층 간 불일치 현상은 중간계층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한

국의 경우는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된 중산층의 규모가 주관적 귀속의식으로서 중산층의 규모보다 더 큰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정반대로 주관적 계층으로서 중간계층의 규모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오히려 중국사회와 더 유사하다. 게다가 북한사회의 계층분화는 중산층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증가보다는 상층과 하층이 동시에 증가하는 양극화 모델을 동시에 띠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한편, 계층 위치를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이 글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중산층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택 소유 변수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는데, 북한의 경우는 직업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객관적 지표로 측정된 계층에서는 직업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주관적 계층에서 직업이 계층 간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줬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간계층에 속하는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과 같은 직업은 북한에서는 상층에 속하는 현상이 매우 특징적이다.

또한 직업 위치와 소득 위치간의 불일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노동자가 소득계층에서 상층에 속하는 비율이 꽤 크며, 반대로 사무원이 소득계층에서 중하층에 속하는 비율도 상당히 존재했다. 특히, 노동자와 가정부인이 소득계층에서 상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데는 시장 경제활동의 참여라는 매개변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관적 계층에서 상층에 속하는 직업은 사무원이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였고, 노동자가 주관적 귀속의식으로서 상층에 속하는 비율은 극히 드물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서 역할을 하지만, 아직 북한 사회에서는 교육수준은 계층 이동의 주요 변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과 직업 그리고 교육수준과 소득 간 불일치가 나타났다.

다른 한편,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계층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의식주 생활은 물론 소비생활과 정보 환경에 이르기까지 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객관적 계층 내에서보다 오히려 주관적 계층 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상층의 생활양식은 상당히 일관되고 동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층의 생활양식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주택의 인테리어, 사치품, 자녀교육, 영상기기 소유 등 일부 항목에서 소비 지향적이면서 계층 상승 지향의 중간계층의 속성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당초 이글 도입부에서 던졌던 질문인 “북한사회에 중간계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제적 지위로서 중간계층이 존재하지만 동질적인 구성 요소나 사회적 속성을 가진 중간계층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 중국사회와 같이 중간계층이 소비문화를 주도하거나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더더욱 말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북한사회에서 중간계층을 구성하는 경제 자본과 문화 자본은 매우 취약하다. 더욱이 한국사회나 제3세계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중간계층의 정치적 역할의 가능성이나 잠재성을 북한사회에서 기대하기는 장기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접수: 2015년 10월 23일 / 심사: 2015년 10월 29일 / 게재확정: 2015년 11월 24일

【참고문헌】

국문 단행본

- 김두섭 외.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대전: 통계청, 2011.
-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북한의 통신혁명은 시작됐는가?” US-Korea Institute at SAIS and Voice of America, 2014.
- 삐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 서울: 새물결, 2006.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전환기의 한국사회: 국민의식조사자료집』.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 앤서니 기든스, 김미숙 외 옮김. 『현대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2001.
-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국문 논문

- 서석홍. “중국 도시지역 중산층의 성장과 소비구조의 전환.” 『현대중국연구』 7권 2호 (2006).
- 유희정. “사회불평등구조에서 관한 중간계급의 의식 연구.” 『한국사회학』 제22호 여름호(1988).
- 이재열. “한국의 사회통합과 중산층 육성의 과제.” 『중산층과 한국의 사회통합』. 한국사회학회 중산층포럼 제3차 (2006.9.21.).
- 이중희. “중국 중간계층의 특성 및 상태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2006).
- 장용석·정은미·김병로·최규빈. “2015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변화: 시장화, 정보화, 자유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2015.8.26.).
- 조동기.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제29권 제3호(2006).
- 한상진. “한국중산층은 보수적인가?” 『사상과 정책』 제3권 제3호(1986).

영문 단행본

Dale L. Johnson, *Middle Classes in Dependent Countries*. London: Sage, 1985.

Mary R. Jackman and Robert W. Jackman, *Class Awareness in the United Stat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Robert F. Miller(ed.),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in Communist Systems*. North
Sydney: Allen & Unwin, 1992.

Determina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iddle Class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Survey of North Korean Defectors

Jeong, Eun Me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find out the factors to determine the middle class in North Korea and to explain the constitutive characters of social classes and social attributes appearing in lifestyle of the middle class.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founded that social differentiation and inequality is significantly underway in North Korea. Discordance between social strata measured by the objective indicators and ones classified as subjective belonging appears very clearly, especially the discordance is heavily on the middle class. In addition,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of North Korean society is a tendency to increase at the same time, upper and lower layers.

Job variable is a significant one of social and economic factors that determine the class position. In particular, job variable shows clearly the difference between social layers in the subjective strata than in the objective ones.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due to socio-cultural factors appears evidently. A gap between social tiers appears clearly in consumption and information environment as well as life. The lifestyle of the upper class is fairly consistent and homogeneous, while the lifestyle of the middle class

shows a relatively heterogeneous aspect.

As a result, there is a mid-tier as economic status in North Korea, but the middle classes with homogeneous components and social attributes have not been formed yet.

Key words: North Korea, middle class, lifestyle, social differentiation, inequality, North Korean defectors.

정은미 (Jegong, Eun Mee)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최근 저서와 논문으로는 『2014 통일의식조사』(공저),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4』(공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정체성 인식과 행동 양식의 메커니즘”,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과 사회변동” 등이 있다.